

# “평화가 경제”... ‘남북경협’ 재확인

###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북 철도·도로연결 연내 착공” 금강산·개성공단 ‘일자리 창출’ ... “365일 소통시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남북간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일자리 창출 등 한국경제가 도약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연구기관의 연구결과 향후 30년간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소개했다.

남북경협의 양대 축이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재개되고 북한의 일부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더한 효과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두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에 주목했다.

그는 “이미 금강산관광으로 8,900

여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강원도 고성 경제를 비약시켰던 경협이 있다”고 했고, “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파주 일대의 상전벽해와 같은 눈부신 발전도 남북이 평화로웠을 때 이뤄졌다”면서 “평화가 경제”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현되면 본격적인 남북경협이 추진될 수 있고 이는 결국 경제성장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경제공동체의 토대가 될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관련,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연내’라는 목표시한을 제시한 것으로, 올해 내에는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고 손용우 선생에게 수여되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부인 김경희 씨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에 들어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르면 내주 개소할 연락사무소에는 남북의 당국자들이 상주할 예정으로, 언제라도 신속한 대면 협의가 가능해져서 남북간 소통수준이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또 연락사무소가 상호

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개성공단에 세워지는 연락사무소가 향후 서울과 평양에 개설될 대표부의 전 단계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채택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공동 회견에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 “여건이 되면 각각 상대방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정기 브리핑

### “선원들, 임금보장체계 강화”

#### 황주홍, ‘선원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육상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는 선원근로자들의 임금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5일 선원근로자의 갑분처분시상한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자가 전차금 또는 전대채권과 선원의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원법 개정안 2건을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육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선원들도 감급제에서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전차금 등과 임금의 상계금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규



정이 삭제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근로자에 대한 감급제도를 정할 경우 금액은 1회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절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선원법에는 금액의 상한규정이 없어 육상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황 위원장은 “선원근로자가 육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실정이다”며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선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임금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서울=강병은 기자

### 이 총리, 무연고 유공자 묘소 참배

#### “많은 사람들이 찾아 기억토록 하는 게 정부 역할”

이낙연 국무총리는 광복절인 15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무연고 독립유공자 묘소를 참배하고, 관리강화를 당부했다.

무연고 묘소는 연구자(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없는 안장자의 묘소로서, 국립대전현충원 내에 있는 독립유공자 묘소 3,464기 중 140기가 무연고 묘소이다.

이 총리는 지난 6월 8일 주재한 제2회 국가보훈위원회에서 “무연고 국가유공자분들의 묘소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매년 국립묘지 내 무연고 묘소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정부 부담으로 비석 보수·교체를 진행하는 한편, 무연고 묘소에 대한 필레이 참배·지역 보훈단체장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이날 무연고 묘지 참배 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봉사해온 대전이문고등학교 학생을 격려했다.

이문고는 현충원의 ‘1교1묘역 봉사결연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



이 총리는 이어 애국지사 묘역을 찾아 권을 정 대전현충원 장으로부터 고지용기 지사, 홍언기 지사, 반하경 지사의 독립할

등에 대해 보고받고, 묘소를 차례로 참배했다.

고 지용기 지사는 의병을 이끌고 강원·충북·경북 등에서 일본 헌병대·수비대와 싸워 큰 공적을 세웠고, 홍언기 지사는 미주 신한민보 주필을 지내고 미주지역에서 임시정부 공채를 판매하는 등 독립운동자금 모금에 기여했다.

반하경 지사는 고종 때 내시로 관직을 지냈고 1910년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되자 비분해 유서를 남기고 대로에서 자결했다.

이 총리는 “많은 사람이 이분들의 묘소를 찾아 나라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수요시위 참석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15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6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집회 1348차 정기수요시위’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 ‘광복절’ 추모 속 건국절 논쟁

### 민주 “해묵은 이념론” vs 한국 “정부 정통성 부정”

여야는 15일 73주년 광복절을 맞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게 일제히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건국시점을 두고 첨예한 이견을 노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봐야 한다며 또다시 ‘1948년 건국론’을 띄우며 해묵은 이념논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국당은 1948년 건국을 부인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들바구니에서 소수야당 바른미래당은 “백해무익한 건국절 논쟁”이라고 규정하며 “이념논쟁 그만하라”고 일갈하고 나섰다.

민주당 백해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제3차 남

북정상회담을 목도하는 등 오늘의 광복절은 작년과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며 “더는 갈등과 반목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분열의 정치, 정쟁만 일삼는 비생산적 정치가 여전히 기승 부리고 있고, 한국당은 ‘48년 건국론’을 들먹이며 해묵은 이념논쟁을 시도하고 있다”며 “광복절을 갈등의 장으로 만들어 보수세력 결집을 꾀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역사 앞에 당당해야 하는 만큼 한국당이 생각하는 헌법 정신과 역사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백해무익한 논쟁이 아닌 생산적인 비판과 발전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운영석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919년 건국일’을 언급하며, 별도의 대통령 메시지 없이 ‘정부수립 70주년 기념행사’는 축소 개최할 계획”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역사관이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사실마저 부정하는 문재인 정부의 역사인식과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또다시 국론분열을 부추기며 국제적 승인을 받은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부 스스로가 부정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광복’이란 이전에 존재했던 국가를 되찾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건국절’을 제정한다면 ‘광복절’의 의미와 충돌한다”고 지적한 뒤 “좌우의 어떤 건국절 주장도 폐기되어야 옳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영국·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들은 건국절이 없고, 우리나라 개천절과 같은 의미의 ‘개국절’이나 광복절과 같은 의미의 ‘독립기념일’ 또는 ‘정부수립일’이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건국절’ 대신 개천절과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미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당들은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황우주 원내대변인은 “한반도 평화와 지속적인 번영이 순국선열이 고대하던 해방된 조국의 모습이라는 광복절의 참된 의미”라면서 “중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중전을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광복 정신이 완성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국민 합의 없는 한일 위안부 합의, 일본의 끊임없는 역사왜곡 시도 등에 맞서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 20일부터 이산가족 상봉...선발대, 금강산행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닷새 앞두고 선발대가 15일 금강산을 찾아 행사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한다.

이종철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선발대 18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통일부 남북회담 본부를 떠나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과해 금강산으로 향했다.

이들은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이뤄지는 숙소와 연회장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상봉일정과 숙소배치, 이동경로 등의 세부사항을 복측과 최종 조율한다.

선발대는 정부와 현대아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상봉행사가 끝날

때까지 현지에 머물면서 행사진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무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상봉행사가 이뤄지는 만큼 고령인 이산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 행사를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인 이산가족 상봉은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된다.

20일부터 2박3일간 남북 이산가족이 북측 가족을 만나는 1차 상봉이, 24일부터 같은 기간 북측 이산가족이 남측 가족을 만나는 2차 상봉이 이뤄진다. /연합뉴스

### 국회, 상임위원장단 특활비 ‘전면 폐지’ 방침

문화상 국회의장은 15일 국회의장단이 사용할 최소한의 경비만 남기고 상임위원장단 몫을 포함한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문 의장이 오늘 ‘특활비를 100% 폐지하라’고 지시했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의장단에 꼭 필요한 경비만 남기기로 결론 내렸다’며 이같이 전했다. /연합뉴스

올해 하반기 남은 특활비는 국회의장단 이외 교·안보·통일 등 특활비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에서 사용할 경비를 제외하고 전액 국고로 반납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특활비는 약 31억원 규모로 이중 70~80%를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특활비 축소상 미리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약 5억원 정도만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국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